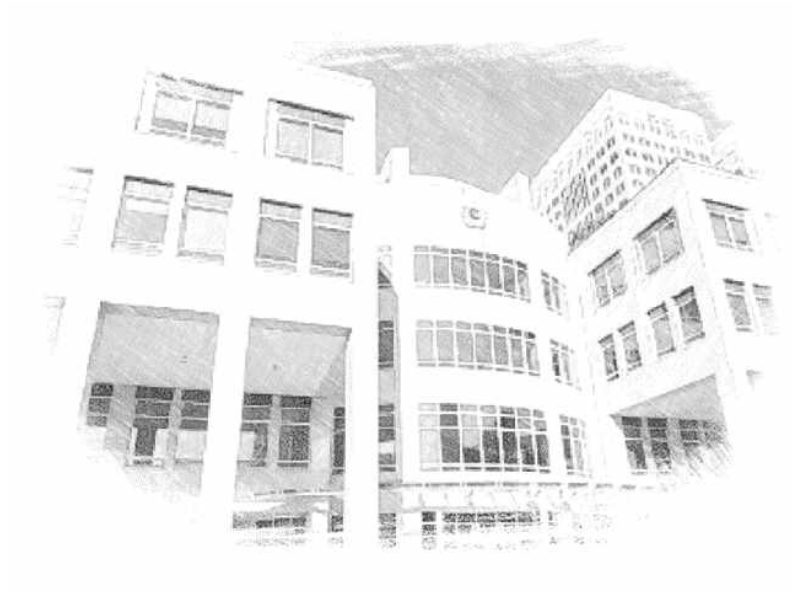


입법정책정보

-제24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가 없이 바닥판·기둥으로 구성된 구조

<법제처 제공>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심의등에 관한 기준으로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⑥지방건축위원회위원회의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차. 건축구조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5조의6제1항에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09. 27.] [대전광역시조례 제6332호, 2024. 09.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1. 실별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취사시설(조리대·개수대 등의 조리시설 일체를 말한다)을 설치하지 말 것
3.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취사장을 1층 또는 주택이 위치한 최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취사장의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발코니 및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 것
4.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5.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
6. 주택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1. 실별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4.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구청장을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제도 등이 변경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측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4조 삭제 <2019.12.27.>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9조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 제3495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시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국가,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②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

<p>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p> <p>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p> <p>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p> <p>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4. 위원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p>	<p>던 경우</p> <p>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3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전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	--

<p>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p> <p>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p> <p>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p> <p>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4. 위원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p>	<p>던 경우</p> <p>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3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전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	--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및 공장·창고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예치금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한다. <개정 2022.4.15.>
-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의 개산(概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할 때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4. 목재, 알루미늄세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공연장 매표소로서 연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방법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공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 부지 내의 기계보호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로 쓰이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등으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공장 및 자동차정비업장 부지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공해배출 저감·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호하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 판넬을 포함한다)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물(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9.27.>

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횡수”란 별표 4와 같다.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3.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9.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6조의2(공사감리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감리의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의3(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대전광역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와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제26조의4(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5(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을 한 사람

②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p>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6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p> <p>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9.></p> <p>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해낸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p> <p>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p> <p>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증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p> <p>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임금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p> <p>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p> <p>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p>	<p>사·검사 및 확인업무</p> <p>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p> <p>②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p> <p>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p> <p>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지정한 자</p> <p>③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7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등)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대하여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공사감리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본다.</p> <p>제28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대행건축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p>제29조(설계도서 전산화)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청사진 도면과 함께 그 도면을 담은 디스켓(CAD 및 SCANNER 방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p> <p>제30조 삭제 <2021.10.1.></p> <p>제3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건축사</p> <p>3. 건축분야 기술사</p> <p>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p>
---	--

<p>사·검사 및 확인업무</p> <p>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p> <p>②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p> <p>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p> <p>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지정한 자</p> <p>③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7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등)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대하여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공사감리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본다.</p> <p>제28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대행건축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p>제29조(설계도서 전산화)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청사진 도면과 함께 그 도면을 담은 디스켓(CAD 및 SCANNER 방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p> <p>제30조 삭제 <2021.10.1.></p> <p>제3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건축사</p> <p>3. 건축분야 기술사</p> <p>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p>	<p>사·검사 및 확인업무</p> <p>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p> <p>②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p> <p>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p> <p>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지정한 자</p> <p>③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7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등)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대하여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공사감리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본다.</p> <p>제28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대행건축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p>제29조(설계도서 전산화)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청사진 도면과 함께 그 도면을 담은 디스켓(CAD 및 SCANNER 방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p> <p>제30조 삭제 <2021.10.1.></p> <p>제3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건축사</p> <p>3. 건축분야 기술사</p> <p>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p>
--	--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9.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 ② 구청장은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 보수,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32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의 조경면적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제1항에 따른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축사

④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⑤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2.29.>

제34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100분의 8
2.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시설: 100분의 5
- ③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 설치할 시설로서 영 제27조의2제3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각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1. 용적률의 완화: $[1 + (\text{공개공지등의 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text{「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

례」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 (\text{공개공지등의 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옥
내의 공개 공지(필로티구조로 된 공개 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면적은 제외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및 도랑부지
2. 공원 안 도로
3. 제방도로
4.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
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6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37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3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대지가 지
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
3.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고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경관지구에 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기준에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제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40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으로서 법 제58조에 따른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1조(맞벽건축) ①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구청장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두 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제42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거용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의 건축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2.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제8장 건축협정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

②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③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5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협정체결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명세
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9장 보칙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③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영 별표 15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을 부과한다.

④ 이행강제금을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로서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옥외계단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8조(옹벽 등 공작물예의 준용) 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3. 유흥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

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중량물로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 이상인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8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도개선
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안전대책 수립
4.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6.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우수공사장 선정) 시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한 공사장 홍보를 위하여 매년 공사현장 관리가 양호하고 시공상태가 우수한 민간시행 공사장을 선정하여 그 공사 시공자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고,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설립 등에 관한 동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시·도지사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인수 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로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상근인력 중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3조제4항제12호) 그 밖에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그 밖에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06. 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46호, 2024. 05.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현지개발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 주택을 1동으로 본다. <신설 2024.5.17.>
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한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6.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

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9.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2조의2(공공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용)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4.5.17.>

제3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
- 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
- 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외의 건축물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20년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공부방 등 주민공동시설
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벽화·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설치되는 개방형 주차·조정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2장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노후·불량 건축물 및 빈집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등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가구 또는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에 관한 계획
2.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진단의 시기 조정은 제35조를 준용한다.
3.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을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신설 2024.5.17.>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3. 동의 총괄표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신설 2024.5.17.>
2.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신설 2024.5.17.>
3.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교통이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 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변경

제11조(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과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

<p>2.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p> <p>3.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p> <p>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p> <p>⑤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준용한다.</p> <p>⑥ 구청장은 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p> <p>1. 법 제32조제1항,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p> <p>2. 법 제45조제1항, 영 제42조에서 규정한 업무</p> <p>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p> <p>③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명세서와 증명서류</p> <p>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서류</p> <p>3. 지급통장계좌번호 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자료</p> <p>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개인정보 등을 제외한다)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p>
--

<p>결정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통보를 한 경우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지급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p> <p>제14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p> <p>2. 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54조를 준용한다.</p> <p>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5조(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p> <p>제1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주택</p>
--

<p>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2.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p> <p>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한다.</p> <p>4. 건축물에 부속되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p> <p>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지·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3.></p> <p>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1.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p> <p>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p> <p>3. 현지개량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p> <p>제17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 따라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p> <p>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격</p> <p>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p> <p>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p> <p>② 삭제 <2020.7.3.></p> <p>③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정보가 적정하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제1호아목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

<p>1.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p> <p>2.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 결과 개요</p> <p>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p> <p>4.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p> <p>제19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시 작성기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p> <p>제20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p> <p>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p> <p>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p> <p>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p> <p>5. 매도청구대상자의 추가 조합 가입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p> <p>6.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변경</p> <p>제2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이사회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p> <p>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p> <p>제22조(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p> <p>제23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p> <p>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p>

<p>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p> <p>제25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② 사업시행계획서는 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26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과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p> <p>1.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8조를 준용한다.</p> <p>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7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p> <p>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p> <p>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p> <p>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p> <p>제28조(재개발·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및 용도)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p> <p>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p> <p>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제28조의2(추가용적률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용) <신설 2024.5.17.> ①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p>	
---	--

<p>②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p> <p>제29조(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p>제3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p> <p>2.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p> <p>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분양신청 안내문</p> <p>2. 철거 및 이주 예정일</p> <p>제31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p> <p>3.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p> <p>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p> <p>제32조(분양 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7.3.></p> <p>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p> <p>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p>	
--	--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계존비속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합산 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면적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5.17.>

1.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주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24.5.17.>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계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 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33조(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32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 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3.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p>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p> <p>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p> <p>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p> <p>제34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2.12.30.></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5조(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요·공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p>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p>제3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 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며,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 	<p>우에는 재산세과세대상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유지·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p> <p>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p>제3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39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고시하는 주택규모별 최소면적 이하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0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한 대지 및 건축물과 제41조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시설·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 중 법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p>제41조(보류지 등) 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지정 및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추가 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
--	---

<p>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p> <p>2. 사업시행자는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p> <p>1. 보류지는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제26조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처분한다.</p> <p>2.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처분한다.</p> <p>제4장 비용의 부담 등</p> <p>제42조(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p> <p>제43조(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공유지 처분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발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p> <p>②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p> <p>③ 해당 건축물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p> <p>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p> <p>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p>	<p>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p> <p>④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0.7.3.></p> <p>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p> <p>제43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p> <p>제5장 감독 등</p> <p>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p> <p>2.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p> <p>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p> <p>4.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p> <p>5.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는 신고수리</p> <p>6.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또는 신고수리</p> <p>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p> <p>8.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p> <p>9.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p> <p>②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p>
--	--

<p>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p> <p>④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0.7.3.></p> <p>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p> <p>제43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p> <p>제5장 감독 등</p> <p>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p> <p>2.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p> <p>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p> <p>4.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p> <p>5.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는 신고수리</p> <p>6.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또는 신고수리</p> <p>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p> <p>8.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p> <p>9.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p> <p>②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p>	<p>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p> <p>④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0.7.3.></p> <p>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p> <p>제43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p> <p>제5장 감독 등</p> <p>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p> <p>2.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p> <p>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p> <p>4.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p> <p>5.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는 신고수리</p> <p>6.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또는 신고수리</p> <p>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p> <p>8.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p> <p>9.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p> <p>②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p>
--	--

<p>2. 법 제112조에 따라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p> <p>3. 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p> <p>제44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정보제공시스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의 제공 시스템</p> <p>2.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시스템</p> <p>②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공동으로 관리, 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45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자치구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20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p> <p>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p> <p>3.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p> <p>제6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p> <p>제4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해당 자치구의회의원</p> <p>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p> <p>3. 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디자인·건축 및 주택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p>	
---	--

<p>이 풍부한 사람</p> <p>제47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p> <p>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p> <p>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p> <p>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p> <p>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p> <p>제48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7.3.></p> <p>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2.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3. 조정 신청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위원장이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4.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p>5. 위원의 재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p> <p>6.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p> <p>1. 감정·진단·시험에 드는 비용</p> <p>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p> <p>3. 그 밖에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드는 비용</p> <p>③ 제2항에서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p> <p>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거나 예치된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p>	
--	--

제7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제4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0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비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폐·공가정비, 방법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 및 소요경비
6.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7.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재원출자

제5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시정비업무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도시정비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3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신설 2020.7.3.,장 번호 순서 조정>

제57조(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조합해산 총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서류

제59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시행 이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3. 법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위반행위 내용 조사, 확인 및 포상금

지급여부 통지

제9장 신고포상금 <신설 2020.7.3.,장 번호 순서 조정>

제60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위원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및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따른 포상금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신청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 12. 18.] [광주광역시조례 제6493호, 2024. 12. 18., 제정]

□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관내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개수가 완료된 하천에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되어 교란된 구간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등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치구에 적용한다.

제5조(재정 지원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 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비 교부 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비 교부 및 사업을 추진한다.

제6조(생태하천복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하천사업 관련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각 분야별 위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및 수생태 분야, 하천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질 및 수생태 분야, 하천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생태하천복원 업무 담당팀장으

로 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하며, 서면심의를 심의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본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제출된 심의의견서에 대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전별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조건명시),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공포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출석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회의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변경심의 대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는 당초 사업구역 내에서 감정평가금액 반영 등은 제외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내용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을 최초 목표보다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

나. 깃대종 또는 주된 수질개선공법의 변경

다. 호안공법의 변경

라. 친수시설의 도입 및 변경

마. 최초 심의 시 검토되지 아니한 새로운 복원계획 등의 반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없이 총사업비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실적보고 시 사업계획변경을 보고하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총사업비의 변경
2. 사업기간의 변경
3. 사업위치(사업량)의 변경
4. 사업물량의 변경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시행계획 변경 신청이 제10조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우선순위 선정) 시장은 다음 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제15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 또는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실적보고)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구청장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자치구청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뚜렷한 성과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례 제정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후관리하고 있는 복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사후관리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추진되는 복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19.] [울산광역시조례 제3038호, 2024. 12. 19., 제정]

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2.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
4.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인재양성 사업
5.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안내·홍보·조사·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
7.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지원센터의 운영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의 운영
4.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구축,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법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658호, 2024. 12. 13., 제정]

□ 제정이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안정된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안정된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애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학대·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30.] [충청남도도조례 제5776호, 2024. 12. 30., 제정]

□ 제정이유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의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의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전략
3. 투자소요액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2. 사업화 역량 강화
3. 상권 창출 연계 사업
4. 해외 진출 지원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456 /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의뢰안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축사·공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축사·공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축사·공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5.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6. 산업체·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간 협력
 7.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출자·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도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로컬크리에이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2.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도 경제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776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1)에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등의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가목에서는 민원처리법에서의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청주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주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는 “사전고지”란 주민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에서 접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안 제5조 및 별표에서는 사전고지 대상시설로 주유소·축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대상 시설의 용도(제1호) 및 대지 위치(제2호) 등을 사전고지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시청 홈페이지(제1호) 등에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원처리법 제7조에서는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외에도 “민원의 내용” 자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해 보이고(각주: 법제처 2021. 2. 24. 의견제시 21-0024, 2023. 7. 25. 의견제시 23-0219, 2021. 4. 28. 의견제시 21-0105 참조), 해당 규정은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원인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2015. 4. 29. 의안번호 제1914930호로 발의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안원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주유소·축사·공장 등의 설

치·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민원처리법 제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청주시조례안에 따른 사전고지 절차는 지역사회에서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인·허가 등의 접수 단계에서 주민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제도로써, 인·허가 등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제출 및 간담회(안 제9조 및 제10조)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보이는데, 안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안 별표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이 접수되는 경우 재량의 여지 없이 청주시장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해당 신청 내용 등을 사전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원처리법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원처리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민원 내용과 민원인 및 특정인(각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주시조례안에 따라 공개하려는 민원 내용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민원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려면 특정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원인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누설”이란 민원 내용 등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법제처 2021. 2. 24. 의견제시 21-0024 참조), 민원인이 인·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에 관한 정보 등 민원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민원처리법 제7조에 따른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해당 신청 내용 등을 사전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민원인이 민원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444 / 요청기관: 경기도 안산시]

□ 의뢰안건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각주: 안산시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지?

나. 안산시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그 체결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회의 사전의결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던 단서를 삭제하여,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해 긴급성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를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

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이하 “안산시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서는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나 협약(이하 “업무제휴등”이라 한다)으로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제3호) 등에 대해 안산시조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안산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안산시조례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안산시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등을 제외한 업무제휴등의 체결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데, 이 사안에서는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등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배분 원리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안산시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업무제휴”란 안산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후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양해각서(MOU) 등의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제휴등은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국내외 기관 등과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제휴등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1. 12. 의견제시 22-0011, 2016. 12. 2. 의견제시 16-0328 참조).

그리고, 안산시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등을 제외한 업무제휴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본문),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사

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데(단서), 이 사안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의 경우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보고 행위가 종료되면 보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지, 보고 후 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을 기다려 이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각주: 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내용상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업무제휴등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업무제휴등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의요지와 같은 업무제휴등의 체결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1. 12. 의견제시 22-0011, 2016. 12. 2. 의견제시 16-0328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안산시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안산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본문),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등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 한편, 안산시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안산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려 하면서, 현행 안산시조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데, 이러한 개정안이 해당 업무제휴등의 체결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업무제휴등의 긴급한 체결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

정을 삭제하여 긴급한 업무제휴등의 체결에 대해 사전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으로 업무제휴등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산시조례안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안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등의 체결이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안산시장이 긴급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업무제휴등은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국내외 기관 등과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제휴등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각주: 법제처 2022. 1. 12. 의견제시 22-0011, 2016. 12. 2. 의견제시 16-0328 참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업무제휴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나 협약으로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업무제휴 등에 대한 의회 보고 등)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전 또는 체결 후 안산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의원간담회, 서면 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의원간담회, 서면 등)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각주: 안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일반조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 ③ (생략)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캐나다,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 주요내용

지난 11월 7일 캐나다는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이하 TPM)에 대한 예외 사유의 범위에 제품 수선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제품을 수리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PM은 임의적 변경이나 무단 접근 등 침해 행위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서,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서 최초로 명문화한 뒤 각국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두 조약 모두 2014년에 비준하여 발효 중이며, 그보다 2년 앞선 2012년에 이미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침해에 대응하고자 「저작권법」을 개정해 TPM 규정을 둔 바 있다.(2012년 캐나다 법률 제20호 「저작권현대화법」. 우리나라의 TPM 법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고: <https://www.riss.kr/link?id=T14507798>)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TPM 규정으로 인해 제품의 수리, 유지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제조사나 특정 업체로 제한되어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43대 의회인 2021년에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TPM 무력화 사유에 제품의 수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종료 전에 법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현재의 제44대 의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하여 2024년 법률 제26호와 제27호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법률 제26호에 따라 제품의 수리와 유지관리, 그리고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TPM 무력화는 그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한, 법률 제27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을 위한 TPM 무력화가 허용되는 범위도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프로그램의 소유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만이 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의 개정으로 그러한 제한을 없앴다. 또한 프로그램 간 호환에 국한되었던 기존과는 달리, 프로그램과 기기, 부품 간 호환을 위한 경우까지도 허용된다.

다만 이 두 법률의 제정만으로 제품을 수리할 소비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와 상표 등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분야의 연방법과 주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캐나다, 소비자 제품 수리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12. 10.